

# 코리아연구원 논평 5호 (2010년 4월 15일)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www.knsi.org/ ☎733-3348, 팩스733-3358/ 100-855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회관 405호/ knsi@knsi.org

## 핵안보정상회의 평가와 한국의 과제

인류역사상 최초로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지난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47개국 정상과 3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회의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자고 호소한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재하였고, 2년 후 두 번째 회의는 한국이 유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지금까지 핵안보가 미국, 러시아 등 일부 핵보유국가들 사이에서만 다뤄져왔지만 오늘날 핵확산의 위험은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핵안보정상회의는 유의미하고 시의적절하다. 문제는 논의 내용의 균형성과 합의사항의 공정성에 있다.

일단 금번 정상회의에 초청된 국가를 살펴보자. 정상회의에 47개국이 참여했지만 핵확산 문제에 관련이 깊은 나라가 모두 참여하지는 못했다. 비록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가 초청되었지만, 그 중 이스라엘은 불참했다. 핵개발국 혹은 핵보유국으로 의심되고 있는 이란, 시리아, 북한은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선별적인 초청을 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금번 회의의 한계를 스스로 안고 출발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안보 정상회담을 열어 비확산 규범의 확산과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묵인하는 대신 이란과 북한을 압박하는 식의 이중적, 선별적 접근은 핵확산의 위험을 줄이지 못하고 미국의 리더십에도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회의 주제가 ‘핵테러’로 한정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 회의인 점을 감안할 때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핵 이용 등 포괄적인 논의를 하면서 NPT의 목적을 정치적으로 재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했다. 그럴 경우 핵안보정상회의의 필요성과 첫 회의의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보다 넓히고 향후 정상회의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더 유용했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핵안보’를 전통적인 위 세 주제와 같은 수준으로 보면서 우선 과제로 핵테러 예방을 제시했다. 거기에 핵안보를 달성하는 또 다른 주요 과제인 핵무기 군축은 제외되었다. 오히려 핵 군축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회의가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 일부 핵강대국들 사이의 협의와 같은 별도의 틀에서 다루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체결하였다. 사실 그것은 양국의 과잉 핵무기 및 관련 시설의 축소를 통해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일 뿐 양국의 핵무기 독점체제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의지를 밝히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FMCT에 가입하더라도 현존 핵분열성 물질은 제한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는 2,100톤의 핵물질이 현존하고 이는 핵폭탄 12만 개를 제작할 수 있는 분량으로 그 상당수는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다. CTBT의 경우도 미국은 조약에 가입하더라도 정교한 컴퓨터 모의실험으로 핵개발을 계속 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안보리 결의 1887호는 NPT 회원국 중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를 담고 있지만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에 핵무기 개발 국가나 NPT 탈퇴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보고서(NPR 2010)는 소위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 핵무기 공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핵무기 감축에 따라 있을 수 있는 불안 심리는 재래식 무기 확충과 미사일방어체제(MD) 강화로 채우고 있다. 요컨대 오바마 주도의 ‘핵안보’의 핵심은 핵테러 및 핵확산 방지에 있지 핵군축은 아니다. 그러므로 오바마의 핵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핵무기 독점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금번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의 진보성이 미국의 보수성 앞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로 부르며 이들 국가의 핵개발을 언급한 것은 핵테러에 초점을 둔 의제의 제한성을 보여주는데 기여(?)했는지 모르지만 적절하지는 않았다. 물론 이 대통령이 미국이 핵안보 위협국가로 지목하는 이란과 북한을 거론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공동인식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선호한 단어를 택한 것은 실수였다. 그리고 그 발언은 의제와도 거리가 멀었고 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것이었다.

한국이 두 번째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글로벌 외교’의 성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점과 북핵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남북관계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정부에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다. 말하자면 북핵문제의 진전,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외교’가 맞물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기다리며 압박하던 대북정책을 바꿀 때가 되었다. (2010/04/15)



**※코리아연구원(원장 박순성)은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 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 knsi@knsi.org) 또는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코리아연구원을 후원하실 수 있으며, 후원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